
한국 경제의 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① IMF 프로그램의 이행, ② 그 이행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의 해소 ③ 경상수지 적자 및 원리금 상환액 부담의 대폭 개선과 외채 누증 방지, ④ 제조업의 조로 현상 방지, ⑤ IMF 관리에서 벗어나는 시기 등입니다.

머리말- 韓國 經濟의 課題

1997년 12월 3일 이후에 귀가 다가올 정도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IMF입니다. 그래서 IMF와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도, 역시 한국 경제의 과제를 말씀드릴 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과제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IMF 프로그램의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벌써 체험을 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것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IMF관리체제 하에 한국 경제가 놓이게끔 만든 것의 주축인 경상수지 적자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의 대폭 개선, 즉 경상수지 대폭 개선, 차질없는 원리금 상환, 그리고 외채 누증의 방지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면을 지금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부터 걱정스러운 몇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만 든다면 제조업의 조로 현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업 공동화 현상입니다. 제조업의 공동화도, 산업의 공동화도 좋지만 우리는 이제 공동화보다는 조로 현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제조업의 조로 현상이 굉장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넷째는 제조업의 조로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IMF 관리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IMF관리체제의 마감은 이걸 지나고 가야 아는 것입니다만, 정치인들 가운데는 1~2년 안에 벗어난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1년 만에 벗어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IMF 자금이 들어오고 이에 대한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것이 2001년부터 이니까, 2000년까지 만 3년 동안 관리체제 하에 있고 그 후

IMF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① 거시경제지표와 거시 정책, ② 금융 부문의 구조 조정, ③ 자본·무역 자유화, ④ 기업의 지배 구조 및 구조 조정, ⑤ 노동 시장의 유연화, ⑥ 투명성 제고 등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거시경제지표 가운데 외환 보유고가 최소한 3 개월치 수입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벗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의 모습과 문제점이 또 궁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났을 때 지금부터 생각할 수 있는 과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IMF관리체제 하의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IMF 관리를 벗어난 후의 우리 경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 프로그램의 履行

한국 경제의 과제들 가운데 IMF 프로그램의 이행을 첫번째로 들었습니다만, 신문을 통해서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즉, 거시경제지표와 거시 정책, 금융 부문의 구조 조정, 자본·무역 자유화, 기업의 지배 구조 및 구조 조정, 노동 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투명성 제고의 여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거시경제지표 가운데서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해석이 신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우리가 말하는 200억 달러나 금년 말까지 400억 달러니 하는 외환 보유고는 최소한 3 개월치의 수입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경상수지의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몇%라든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전망치인데, 예를 들면 금년에 경제 성장률 1%로 일괄적으로 우리와 IMF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꼭 1%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하다보면 1%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가

IMF 관리 하에서 기업의 과제는 우선 부채 비율을 낮춰야 하고, 국제 기준에 합당한 결합채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계열사간의 채무 보증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의 지배 구조 및 구조 개혁을 빠르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를 해서는 안된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외환 보유고는 3 개월치 이상의 수입액을 지켜야 됩니다.

IMF 관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경상수지 적자폭의 축소 및 개선, 금융 부문의 구조 조정, 기업 지배 구조 및 기업 구조 개혁, 노동 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정부나 기업이 발표하는 통계치나 회계 자료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IMF 프로그램 가운데서 금융 부문의 구조 조정과 기업 지배 구조 및 기업 구조 조정·개혁,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管理體制 下の 政府와 企業의 課題

제가 금융 부문 개혁과 기업 지배 구조 및 기업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 둘은 IMF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지배 구조나 기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기업은 부채 비율을 낮추어야 하고,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국제 기준에 비춰서 합당한 결합채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그리고 계열사간의 채무 보증을 금하는 것이 구조 조정의 핵심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각각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정이 있더라도 구조 개혁은 빨리 해나가야 됴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우선 기업의 과제

정부의 과제는 첫째, 금융 부문과 기업의 구조 개혁을 촉진시키고 그 여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감독 기능 강화, 공공 부문 구조 개혁, 금융 부문 및 기업의 구조 조정 상의 문제 발생 시 IMF와의 협의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IMF 프로그램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과제는 첫째, 말할 것도 없이 금융 부문과 기업의 구조 개혁을 촉진시키고 그 여부를 감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로서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다음으로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섭하란 뜻은 아니고 기업은 기업대로 뛰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 역할이 공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정 거래 아니 독점금지법에 따라서 집행할 것은 당장 집행해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법 제정도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 감독 기구 쪽의 강화를 위해서 지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생겼고 뒤를 이어 감독원이 생겼습니다만, 일단은 성실히 기능을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과제는 스스로 뼈깎는 노력을 통한 공동 부문의 구조 개혁, IMF와의 거시경제지표에 대해 계속적 협의, 기업의 구조 조정이나 금융 조정 상의 문제 발생에 대한 IMF와의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들이 정부가 IMF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해서 지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IMF 프로그램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위에서 겪고 있을 것이고 또 기업에서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기업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업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는데 기업에게 실업 방지 대책을 세워서 실시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과 관련된 부작용 가운데 첫번째는 높은 실업

IMF 부작용과 관련된 첫번째는 높은 실업률로서, 우리 기업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일단 가능하면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사람을 위해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공공 부문이든 처음부터 실업 방지 노력도 없이 실직자로 내모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 몇년 전에 중앙일보사에서 주관한 산업 시찰에서 미국 서부의 기업체들과 일본의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맨처음 간 곳은 실리콘밸리로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퍼드대학교와 접해져 있는데, 바로 거기에 휴렛패커드社가 있습니다. 휴렛패커드社에 세 시간 정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간 일행들이 볼 때는 전율이 날 정도로 무섭게 군더더기를 빼려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로 새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었지만 판매가 안 되면, 그 팀을 즉시 해체하고 또 새로운 팀을 계속 운영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구 개발(R&D)비를 매출액의 8%로 정해놓고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그야말로 사람을 완전히 기계로 만들어놓은 것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또 미국의 다른 기업과 한국의 삼성전자, 일본의 도시바(東芝)와 닛산(日産)도 가보았는데, 그렇게 오싹오싹 떨리던 휴렛패커드社와는 달리 좀 느슨하고 사람 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군더더기를 없애버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휴렛패커드社는 지금 감원이나 정리해고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도 해고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가능하면 버틸 때까지는 좀 버티면서 사람을 위해서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실업 방지 대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대책으로서는 기업이 응하든 않든 공공 부문이든 간에 가능한 한 실직자로 내몰지 말고 직장에 잡아두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여덟 시간을 여섯 시간으로 줄이면서라도 붙잡아두는 방향으로 가고, 도저히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맨처음부터 그런 노력도 안하면서 실직자로 내몬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할 일은 우선, 지금은 돈이 많이 들지만,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서울역이나 지하철역 등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실직자들의 이민이나 해외 취업 알선 노력, 남북 경험의 강화를 통한 자원 개발에 기업을 참여시켜 일자리 주선 등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 요전에 기업과 재계쪽에서는 해고 방지와 구조 조정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구조 조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구조 조정을 한답시고 여러 가지 검토와 생각도 없이 난도질을 해버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돈이 많이 들런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간접자본(SOC)을 정비·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직자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SOC의 확충은 또한 수출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밖에 워낙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농촌을 떠났던 도시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역이나 지하철역 등 길거리에서 지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정부로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 국내에서 실직자로 있는 것보다는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민이나 해외 취업 알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자원을 개발하는 데 기업을 참여시켜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주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주선하는 일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勞使政委員會를 발족시켜서 勞使政간의 합의를 도출했는데, 저는 거기에 두 주체를 더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농촌으로 돌아가 일할 사람들 즉 농민이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 단체나 소비자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물가 폭등과 관련해서 농민과 소비자 단체가 협력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

셋째, 경상수지의 대폭 개선과 차질없는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수출의 획기적 증가 및 수입의 가능한 감소, ② 외국으로부터 투자의 적극 유치, ③ 소비 감소와 저축 증대가 필요합니다. 수출의 경우 그 증대를 위해서는 결국 품질을 좋게 하고 가격을 싸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3者합의서가 아니라 5者합의서가 되어야 겠고, 가능하면 그냥 우리가 지킨다는 식이 되지 말고,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다 밝혔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증이 아니냐고 할지 몰라도, 좀 강제성있는 하나의 사회 개혁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IMF 관리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니 더 걸릴지도 모르고 참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5者가 합의한다면 온 국민의 합의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가장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셋째, 경상수지의 대폭 개선과 차질없는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는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수입은 가능하면 늘리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해외로부터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셋째는 소비를 줄이고 국내 저축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수출입의 경우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에는 물론 상품 수출이 있고 그 다음은 용역(서비스) 수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용역 수출을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고 아직 빠르다고 봅니다. 도리어 용역 수입을 줄이는 것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늘리는 데 기여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결국, 상품의 수출은 크게 늘리고 수입은 덜 늘리는 방향으로 끌여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결국 내수 시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수출 상의 애로를 타개해줘서 계속 수출을 늘려야 합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품질을 좋게 하고 가격을 싸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IMF 관리 하에 놓이면서부터 조용해진 말이 있습니다

품질을 높여 수출을 늘린다면, 수입을 줄이는 방법은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온 부품 소재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조립 가공형으로서, 수출 증가에 병행해서 수입이 늘게 돼있는 ‘수입 유발 구조형’이기 때문입니다.

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은 국내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지만 국내 개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또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로열티를 좀 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보다 높은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일단은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품질을 높여 수출을 늘린다면 수입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출이 늘면 수입은 덜 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사들여와 그것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조립 가공형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에 병행해서 수입도 늘게 돼있는 ‘수입 유발 구조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경우는 앞에서 품질을 올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을 조금 더 낮추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은 환율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수출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달러당 800 원밖에 안 하던 환율이 이제는 1,350 원 혹은 1,400 원, 한때는 1,800 원까지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환율에 너무 의존하여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아마 물가나 그밖의 다른 것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금 필요할 때 하고 기본적으로는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는 수출에 연동되어 늘게 되어 있는데 반해, 수출의 경우는 고급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를 유지하는 데 우리나라는 투자 유인이 될만한 자연 자원이나 싼 임금 등의 미끼가 없기 때문에, 풍부한 고학력의 인적 자원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품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밀리고 중저급 품목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후발개도국에게 밀려 중간에 딱 끼있는 샌드위치 신세에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당할 길이 없으므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일단 품질을 향상시켜 수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화제를 바꾸어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를 푼다·못 푼다 야단들인데 그렇게 당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효과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미끼 즉, 자원의 미끼라든가 또 싼 임금의 미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럴싸한 미끼라도 만들어 놓고 던져야 외국 투자라는 고기가 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자연 자원은 부족하고 빈약하지만 인적 자원은 풍부합니다. 즉, 대학 출신의 고학력자들이 많으니까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특기를 가진 고급 인력으로 외국 투자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계통에서는 사람이 적으니까 중국에 가서는 안 되고 한국에 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외국 사람들이 갖게끔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나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우 고려할 중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식 시장을 통해서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자를 들어오게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 가운데 또 하나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량 기업만을 사들이려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업쪽에서는 그들의 기업 인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대비는 기업이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서 이를 감안을 하면서 일단 투자 유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

넷째, 제조업의 조로화 현상 방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수출의 주역인 제조업 상품의 활발한 수출을 통한 제조업의 활성화, ②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의 활성화, ③ 국내 제조업 쪽으로의 외국인 합작 또는 단독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히, 핫머니의 유출을 찾아내고 감시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직접 투자 지향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넷째, 제조업의 조로화 현상 방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수출의 주역인 제조업의 제품(상품)을 활발히 수출하여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앞에서 언급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즉, 바로 제조업쪽으로는 합작 또는 단독 투자를 통해서도 제조업 조로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의 조로 현상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놓고 볼 때, 세계화라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세계화로 붙여지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농업도 종사하는 인구가 한 3% 밖에 안 되지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농업국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일본과 독일이 미국과 견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제조업도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둘을 놓고 볼 때 미국의 경우는 둘 다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좀 약한 편이고, 대신 일본과 독일은 제조업이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지속적인 수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조업의 조로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SOC를 확장하라고 했는데 그 뜻은 농수산물이나 공산물을 유통시켜 배분 하는 데 유익한 역할 즉, 그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 산업의 핵은 제화 산업 즉, 농업과 광공업이고, 나머지는 그 산업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

우리가 3년 후 IMF 관리의 마감을 가정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① 경상수지 대폭 개선과 차질없는 원리금 상환의 계속 강조, ② 소재·부품 산업 육성의 계속 강조, ③ 고물가와 고실업 문제의 미해결, ④ 소득 분배의 악화, ⑤ 제조업의 조로화 현상 계속 등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모습은 금융 구조 개혁과 기업의 구조 조정에 있어 미국이나 일본의 모습에 가깝고,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 진입이 아닌 선진국에 접근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니다. 소위 서비스 산업은 지원 업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놀라운게도 미국식(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있습니다. 1993년부터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95만 명 정도가 더 많았고, 1997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서 110만~120만 명(?) 정도 더 많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원인은 제조업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만 2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이나 농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가 제조업의 종사 인구보다 100만 명 이상 더 많다는 현상이 과연 정상적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평균을 내보니까 아직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1993~94년을 보면 우리 제조업의 비중보다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산업화의 역사가 매우 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종사 비중이 여전히 우리와 같은 정도라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MF 마감 以後 우리 經濟의 모습

우리나라가 3년 뒤에 IMF 관리에서 벗어났다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 살펴보면, ① 경상수지의 대폭 개선과 차질없는 원리금 상환은 그대로 계속 강조될 것 같고, ②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도 계속 그럴 것 같고, ③ 부작용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의 현실은 IMF 관리하에 있고, 또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적 불황이 아닌 인위적 불황임을 알고, 모든 군더더기와 들떠 있는 것을 빼버림으로써 정부·기업·가정 등 우리나라 전체가 견실한 체제를 갖추고, 외국인들로부터 선진국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언급이 안 된 물가는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IMF 이후에도 계속 될 것 같고, 고실업 문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며, ④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쪽은 실직자가 되어 불리하고, 한쪽은 고금리로 가만히 있어도 유리한데, 이 현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⑤ 제조업의 조로 현상도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3년 뒤에 IMF 관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 경제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구조 개혁이나 기업 구조 조정이 성공한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은 IMF 관리에서 얻어진 하나의 성과들 가운데 첫째 아니면 둘째로 꼽힐 것인데, 일단은 미국과 일본 기업의 모습 또는 선진국 정부의 모습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OECD의 회원국이 됐다고 해서 선진국이 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선진국 문턱에 가까이 들어선 상태는 아니고, 계속 선진국에 접근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맺음말

얼마전까지도 한국 경제는 외국에 나가도 고개를 들고 다닐 정도는 되었는데, 1997년 12월 3일부터는 그냥 고개를 떨구고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귀국한 어느 대사도 도저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IMF 관리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업도 정부도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가지 강

조를 한다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순환하는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는 말은 불경기가 오고 호경기가 오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경기라는 것은 들떠 있는 것을 가라앉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런 역할도 하기도 전에 계속 확대 정책을 써서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암만 발버둥쳐도 그 IMF 관리 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자본주의 발전 과정 상에서 자연적으로 겪는 불황이 아닌 인위적으로 맞이한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불황의 장점을 살려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굳 더더기를 빼고 들떠 있는 것 다 버림으로써, 이제 정부·기업·가정 등 우리나라 전체가 견실한 체제를 갖추고 선진 외국인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가까워졌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